

## 공적 부실채권정리기구의 필요성과 정책 대안 -해외 운영사례를 중심으로-

윤한국, 김진섭\*  
부산대학교 경영대학

### The Necessity of A Public Non-Performing Loans Resolution Organization and Policy Alternatives (Focusing on overseas operations)

Han-Kuk Yun, Jin-Seop Kim\*  
School of Business, Pusan National University

**요약** 우리나라는 1997년 IMF 경제위기 극복 과정에서 공공기관인 한국자산관리공사에 부실채권정리기금을 설치하여 금융회사 부실채권을 조기에 매각하도록 하였다. 그러나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 발생 이후 정부는 증가하는 부실채권의 신속한 정리를 위해 정부는 부실채권시장을 민간 주도로 개편한다는 계획 하에 공적기구의 역할을 축소하였다. 부실채권정리의 행태는 민간 AMC를 중심으로 부실채권을 낮은 가격에 인수하여 재매각함으로써 매각 차익을 획득하는 수익성 위주의 흐름으로 편중되고 있다. 그러나, 금융위기 상황에 직면했을 때 금융회사들을 위한 실질적이고 체계적인 구조조정을 할 수 있는 시장조성자가 필요하나, 단기적 수익을 중시하는 민간 AMC에게 시장조성자로서의 역할을 기대하기는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금융위기 발생에 대비하고 효율적인 부실채권시장을 유지하기 위해 정부는 부실채권시장에서 민간부문의 한계를 보완하고 공정한 경쟁을 할 수 있도록, 공적기구와 전문성을 갖춘 민간 부문을 합친 혼합형 부실채권정리 시스템을 고려해 볼 필요가 있다.

**Abstract** Korea established a Non-Performing Loans Resolution fund to the Korea Asset Management Corporation, a public institution, to sell NPL of financial companies early and overcome the 1997 IMF economic crisis. However, the government reduced the role of public organizations after the 2008 global financial crisis to reorganize the NPL market led by the private sector to clean up the growing NPL quickly. As a result, liquidating NPL is concentrated on profitability-oriented trends in acquiring NPLs at low prices and reselling them, led by private AMCs. However, a market creator is needed during a financial crisis to conduct practical and systematic restructuring for financial companies. But, it is unlikely to expect a market creator for private AMCs that value short-term profits. Therefore, the government needs to consider a mixed NPL Resolution system that combines public organizations and specialized private sectors to compensate for private sector limitations and compete fairly. In effect, the mixed NPL Resolution system can prepare for the financial crisis and maintain an efficient NPL market.

**Keywords** : Non-Performing Loans Resolution Fund, Public Institution, Private AMC, Financial Crisis, Combines Public Organizations and Specialized Private Sectors

---

\*Corresponding Author : Jin-Seop Kim(Pusan National Univ.)

email: kjinsep@pusan.ac.kr

Received January 10, 2022

Accepted March 4, 2022

Revised February 17, 2022

Published March 31, 2022

## 1. 서론

우리나라 경제는 1960년대 이후 정부 주도의 경제발전정책의 성과에 힘입어 한강의 기적이라고 불리는 높은 경제성장을 이룰 수 있었다. 그러나 정부 주도의 경제발전전략이 장기간 지속되면서 민간기업의 차입경영이 고착화되고 경제력이 소수의 재벌 기업에 집중되는 문제가 발생하였다. 대기업이 정부의 보호 하에 금융회사로부터 막대한 차입 등을 통하여 사업을 확대하는데 치중한 결과, 재무구조가 악화되는 등 우리 경제의 뇌관으로 자리하고 있었다[1-7].

국내 부실채권시장은 외환위기 이후 본격적으로 형성되기 시작했다. IMF 외환위기는 1997년말 발생했으며, 주요 요인은 기업 재무 및 산업구조의 취약성, 금융회사의 여신관리 미흡, 대외수지 관리의 불균형, 금융감독체제의 미비, 민주적 시장 질서의 부재, 동남아 금융위기의 전이 등이었다[8].

1997년 초 H그룹으로 시작된 연이은 대기업 도산과 금융회사 부실의 급증, 대외 신인도 하락으로 인해 우리나라는 IMF 경제위기라는 미증유의 상황을 경험하였다. 외환위기가 가시화된 그 해 12월에는 금융회사와 기업의 도산이 반복되면서 어음부도율이 1.49%까지 상승하였고 이로 인하여 실물경제 침체의 골이 매우 깊어졌다. 기업 부도가 확산됨에 따라 금융회사의 부실채권 규모도 크게 확대되는 등 금융회사의 건전성도 악화되었다. 특수은행을 포함한 은행권 전체의 무수익여신(고정+회수의문+추정손실로 분류된 여신)은 1996년 말 15조 2,080억 원에서 1997년 말 32조 2,890억 원으로 2배 이상 증가하였다.

1990년대 후반 민간 금융회사들이 부실채권을 처리하던 주된 방식은 채권 추심 또는 법원 경매 등이었기 때문에 전문성 부족과 정리시간 지연 등으로 신속하고 효율적인 부실채권의 정리를 기대하기 어려웠다. 이에 정부는 공공기관인 한국자산관리공사에 부실채권정리기금을 설치하여 금융회사 부실채권을 조기에 매각하도록 하였다.

부실채권정리기금을 통해 21.5조 원의 기금을 조성하고, 2002년 11월 22일까지 5년간 39.2조 원을 투입하여 180여 개 금융회사 부실채권 111.6조 원을 인수하였으며, 인수한 부실채권을 다양한 방법으로 정리하여 46.7조 원을 회수하였다. D사 주식 등 현물로 출원기관에 반환되는 잔여재산까지 고려할 경우 회수율은 무려 120%를 초과하는 세계적으로 유례를 찾아보기 어려운 기록을 남겼다.

이 과정에서 우리나라에도 부실채권이 공식적으로 거래되는 부실채권시장이 형성되었으며, 이후 유암코, 대신 F&I 등 민간 부실채권정리회사가 참여하면서 현 시점에서는 부실채권시장이 성숙단계에 들어섰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그러나 금융회사의 부실화는 금융시스템의 위기로 이어질 수 있기 때문에 금융시장의 안정성을 확보하기 위해 부실채권 비율을 일정수준 이하로 유지해야 할 필요성이 있는데, 이 역할을 민간 AMC가 담당하고 있다[9].

민간 부실채권정리회사 주도로 진행되고 있는 우리나라의 부실채권 정리는 주로 채권자인 금융회사 위주로 이루어지는 문제점이 있다. 부실채권이 경제 내에서 완전히 정리되기 위해서는 금융회사로부터 부실채권을 분리시켜 금융시장을 안정시키는 것 외에, 채무자로부터도 부실채권을 분리시켜 부실채권을 야기한 채무자의 재기를 유도할 필요가 있다. 이러한 보다 넓은 의미의 부실채권 정리를 위해서는 민간의 부실채권시장을 지원하고 보완하는 견제자로서의 역할을 담당하는 공적기구가 필요하다.

기존 선행연구에서는 민간 AMC의 문제점 위주로 공공부문의 중요성을 제시하고 있는데 반해, 본 연구에서는 부실채권 정리를 보다 넓은 의미에서 채무자의 입장으로까지 해석하고, 채무자의 경제활동 제기의 관점에서 공적 부실채권정리기구의 역할에 대해 검토함으로써 기존 선행연구의 관점을 확대하고자 한다.

그리고 금융위기 시 공공부문의 역할을 최소화한 중국과 일본의 실패 사례를 제시함으로써 미국의 사례를 중심으로 공적 부실채권정리기구 운영의 성공사례를 제시한 선행연구와 차별화하고자 한다.

한편, 본 연구에서는 코로나19에 따른 경제활동 축소로 가계부채 증가, 소상공인 대출 등 경제적 어려움이 가중된 상황에서의 공공부문의 역할을 제시하였다. 만기연장, 상환유예 등 충격완화 정책이 2022년 1분까지 한시적으로 운영되는 만큼 이연된 부실이 폭증할 가능성에 대해 선제적인 금융안전망의 구축을 제안하는 등 코로나 19 상황에서의 역할을 제시한 것 역시 다른 선행연구에는 없었던 새로운 관점의 연구라 할 수 있다.

본 연구에서는 2장에서 부실채권의 다양한 정의 및 정리의 필요성을 살펴보고, 3장에서는 현행 국내 부실채권정리시장의 문제점을 살펴본다. 이어 4장에서는 해외 부실채권정리기구의 운영 사례 및 시사점을 살펴보고, 이를 토대로 공적 부실채권정리기구의 역할 및 발전 방향에 대해 모색해본다[10-16].

## 2. 부실채권의 정의 및 정리 필요성

### 2.1 채권자 입장

채권자인 금융회사는 부실채권을 수익성 관리 관점에서 정의하고 있다. 이에 따르면 부실채권은 일반적으로 이자를 받지 못해 수익을 내지 못하는 금융회사의 대출금을 의미하며 무수익여신으로 통칭된다. 즉, 금융회사의 여신 중 채무자의 부도 등 여러 사유로 인해 변제기가 도래하였음에도 불구하고 해당 원리금이 정상적으로 상환되지 않는 금융회사의 대출금을 의미한다.

반면 금융감독 기관은 금융회사의 건전성 감독 및 이를 통한 금융시장 안정의 관점에서 부실채권을 보다 세분화하여 정의하고 있다. 「은행업감독규정」 등 금융회사 관련 규정에서는 부실채권을 자산건전성 분류 기준에 의거 분류된 '고정' 이하의 여신의 합으로 규정한다.

부실채권은 무수익여신으로서 금융회사의 자금이 수익을 내지 못한 상태에서 고정화되는 것을 의미한다. 부실채권이 확대되면 금융회사의 자금 운용 능력이 제약되면서 고객의 자금인출 요구에 대응하지 못함으로써 금융회사의 안정성이 위태로워질 수 있다[17]. 부실채권 정리는 채권자인 금융회사의 유동성·수익성·안정성 제고, 대외경쟁력 강화, 관리비용 축소에 기여한다.

따라서 채권자인 금융회사는 유동성, 수익성 및 안정성을 제고하고 대외경쟁력을 강화하는 한편 관리비용을 축소하기 위해 부실채권을 효과적으로 정리할 필요가 있다.

### 2.2 채무자 입장

반면 채무자 입장에서 부실채권이란 재무적, 재정적 어려움에 처하여 일정 기간 이자를 지급하지 못하거나, 신용위험으로 인해 집중적으로 관리를 받게 되는 채무자의 부채를 의미한다. 연체채무자들은 금융회사 또는 추심회사로부터 지속적으로 추심압박을 받고 있으며 취업 등에서도 불이익을 받는 등 정상적인 사회 생활 및 경제 활동을 하기 어려운 상태에 처하게 된다.

부실기업의 경우에도 금융회사로부터 자금회수 압박을 받게 되며 추가적인 자금 대출을 받지 못함으로써 경영정상화가 어려운 상태에 처하게 된다. 이에 따라 채무자의 입장에서 부실채권은 채무자 자신 및 경제의 안정성에 부정적인 영향을 주는 채권으로 정의할 수 있으며, 이는 채권자인 금융회사의 관점에서만 보는 협의의 부실채권보다는 광의의 개념이라 할 수 있다.

이러한 광의의 부실채권 정의에 따른 경우에는, 금융회사가 부실채권을 매각하거나 상각함으로써 향후 금융

회사의 건전성에 대한 영향이 사라진 경우에도, 경제 내에 여전히 원리금을 상환하지 못하고 추심대상이 되는 채무자가 남아있는 경우 부실채권이 잔존하는 것으로 보아야 한다. 따라서 이러한 정의에 따른 경우 부실채권 정리란 부실채권을 단순히 금융회사로부터 분리해내는 것이 아니라, 부실 채무자로부터도 분리해냄으로써 채무자와 경제 전반에도 부정적 영향을 주지 않도록 하는 것을 의미한다.

### 2.3 경제 전반 측면

부실채권시장은 경기후행적 성격을 지닌다. 우리나라의 IMF 외환위기와 미국의 저축대부조합(S&L) 파산 사례 등을 통해 볼 때, 경제성장률 저점 이후 부실채권 비율은 약 6개월~1년이 경과한 시점에 최고치를 기록했다[18].

금융회사의 높은 부실채권 비율은 금융회사로 하여금 소극적 경영을 초래하여 중소기업에 대한 자금지원 위축, 경제 전반적인 자금경색의 결과를 초래함으로써 경제 시스템의 불안정성을 확대할 우려가 있다. 금융회사는 부실채권이 확대될 경우 유동성과 건전성이 악화되면서 대출을 회수하게 되며 신규대출에 대한 심사기준을 강화하게 된다. 이 결과 금융시장에 신용경색이 발생하면서 기업과 가계의 부실화가 심화되며 부실채권이 더욱 확대되는 악순환을 초래하면서 금융위기를 발생시킬 우려도 있다.

이에 따라 부실채권 정리는 금융회사의 건전성 향상, 가계 및 기업경제의 활성화를 통해 경제 전반이 선순환되는 효과를 가져올 수 있다. 부실채권 정리로 신용위험이 낮아진 금융회사들은 기업에 대한 자금지원 및 투자를 확대함으로써 국민경제 활성화를 견인할 수 있다. 특히 금융회사의 금융 중개기능이 강화됨으로써 기업투자와 생산자금이 확대되어 민간투자 및 총수요증가에도 기여한다. 따라서 금융회사들은 시의적절하고 효과적인 방법을 이용하여 부실자산을 처리함으로써 가계 및 기업경제를 활성화하여 경제 전반의 선순환을 이뤄야 한다[19-24].

## 3. 현행 부실채권시장의 문제점

### 3.1 채권자 중심의 부실채권 처리 문제

최근 부실채권 정리의 행태는 민간 부실채권 처리 기관 중심으로 일시적인 유동성 부족의 기회를 이용하여 부실채권을 낮은 가격에 인수하여 재매각함으로써 매각

차익을 획득하는 등 채권자 이익 위주의 흐름으로 편중되고 있다.

부실채권 재매각은 채무자의 동의 없이 이루어지고 있어 채무가 실제 존재하고 있는지 확인하기 쉽지 않으며, 채무상환 협의에 따른 어려움 또한 가중되어 사회적 비용이 증가하는 구조적인 문제를 야기하고 있다.

원금 상환능력이 없는 채무자의 연체채권은 정상화되지 못하고 부실채권으로 관리되며, 해당 채무자는 수년 동안 금융채무 불이행자로 등록되고 채권 소멸 시효가 완성될 때까지 추심대상이 된다. 이들 금융채무 불이행자들은 신규 금융거래가 제한되고 회사 취직 시 불이익을 받는 등 사회생활 및 경제활동이 제한되며 금융회사 또는 채권추심기관으로부터의 채권추심 압박을 받게 된다.

### 3.2 민간 AMC의 전속시장화

그 간 국내 부실채권 정리는 한국자산관리공사 등 공적기구가 전담하여 왔다. 그러나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 발생 이후 증가하는 부실채권의 신속한 정리를 위해 정부는 2009년 부실채권시장을 민간 주도로 개편한다는 계획 하에 공적기구의 역할을 축소한 바 있다.

이러한 정책 방향에 따라 대형 민간 AMC가 자신의 출자은행이 매각한 부실채권의 인수를 확대하면서 국내 부실채권시장의 전속시장화가 심화됐다. 유암코는 국내 6개 은행이 공동 출자한 회사이며, 대신F&I로 변경되기 전 우리F&I는 우리금융지주가 100% 출자한 회사이다. 부실채권시장에서 유암코와 대신F&I의 시장점유율이 2010~2012년 사이에 70%를 상회하고 2013년 이후 부터는 60%대를 기록함에 따라, 은행들이 부실자산을 자신의 자회사에 맡겨둔다는 지적이 제기되기도 한다.

한편, 2013년 이후 부실채권시장에 화인자산관리, 외환F&I 등의 새로운 민간 AMC들이 참여하면서 두 개의 대형 민간 AMC의 시장점유율이 하락하는 등 변화의 움직임이 보이게 되었다. 그러나 이에 대한 시장의 평가는 다소 엇갈리고 있다. 일각에서는 중대형 AMC가 늘어나면서 기존 양각 구도에서 다각 구도로 전환되고 경쟁이 더욱 심화될 것이라는 견해가 있다. 반면 두 개의 대형 민간 AMC의 자산 및 자본 규모, 연간 부실채권 매입 규모, 부실채권 분석 및 투자 경험 등을 고려할 때, 과점시장 구조는 당분간 지속될 것이라는 견해도 있다[25].

### 3.3 민간 부실채권시장의 기능 미흡

전 세계적으로 다양한 형태의 주기적인 경제위기가 발생하고 있는 가운데, 부실채권시장의 활성화 여부는 위

기 발생 시 국가적인 부담을 경감하는 주요 요소로 작용한다.

금융회사의 부실 심화는 금융시스템의 구조적 위험을 초래할 가능성을 내포하고 있기 때문에, 시장의 안정성 확보를 위해서는 부실채권시장을 최대한 활용하여 부실채권 비율을 일정 수준 이하로 유지해야 한다. 그러나 경제위기 발생 시 대규모로 확대되는 부실채권에 대해 부실채권시장의 주요 주체인 민간 AMC의 처리 능력에 대한 검증은 부족한 상태이다.

현재 민간 AMC의 부실채권 처리는 담보부채권 위주로 이루어져, 위기 발생 시 증가가 예상되는 악성 부실채권에 대한 처리 기능과 역할은 제한적일 수 밖에 없다. 국내 대표적인 부실채권 투자자인 유암코와 대신F&I가 투자한 부실채권은 글로벌 금융위기 발생 이전까지 담보채권 위주로 구성되었으나, 이후 특별채권이 혼합된 담보채권 풀(pool)이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

제2금융권 등 부실 가능성이 높은 기관의 부실채권을 처리하는 데에는 능력이 부족하고, 인수하더라도 일괄인수 후 소규모로 매각함으로써 유통시장 활성화에 제한적인 것으로 보인다.

이로 인해 민간중심 부실채권시장에서 기대했던 기업 구조조정 및 고위험 자산에 대한 상시적 부실처리 역할은 미흡한 것으로 평가되고 있다. 부실채권시장의 독과점화 및 전속시장화는 경쟁을 제한하여 시장 혁신과 발전을 저해함으로써 자율경쟁시장의 순기능을 위축시킨다.

## 4. 해외 부실채권정리기구의 운영 사례

### 4.1 미국 : RTC(Resolution Trust Co.)

미국 정부는 1980년대 후반 들어 상업은행과 함께 금융회사의 한 축을 구성하던 저축대부조합(S&L)이 대량 파산하고 동 조합의 보험기구인 연방저축대부공사(FSLIC)가 파산상태에 이르자 공적자금을 조성·투입하였다. 저축대부조합은 단기 예금을 받아 장기 주택저당대출(mortgage loan)에 자산을 집중 운용하고 있었는데, 1970년대 후반부터 금리가 상승함에 따라 조달 비용이 증가하던 상황이었다.

미 정부는 도산한 S&L 처리를 위해 RTC를 설립하고 RTC가 채권을 발행하여 정리에 필요한 자금을 조달하도록 하는 등의 개혁을 단행하였다.

RTC는 부실 저축대부조합의 정리를 위해 1989년부터 1995년까지 총 2,273억 달러를 투입하였으며, 이 중

공적자금은 913억 달러에 달하였다.

공적자금 투입 이후 저축대부조합의 부실채권 비율은 크게 하락하며 안정화되었다. 부실채권 비율은 1987년 4.68%까지 상승하며 최고 432억 달러에 달했으나, 공적자금이 투입된 이후 점차 감소하여 1994년 이후 부실채권 비율은 1%대로 하락하였으며 규모도 100억 달러 미만으로 축소되었다.

RTC가 727개의 부실 저축대부조합을 정리하면서 활용한 방식은 자산부채인수(P&A), 부모예금이전(IDT), 보험금 지급(PO) 등의 단순한 세 가지 방식을 이용하는 것이었다. 이같이 단순한 정리방식은 절차의 투명성 제고 및 자산매각 등 처리의 일관성과 같은 장점을 보유하고 있다.

미국은 구조조정 관련 시장이 발달되어 다양한 금융상품을 활용할 수 있었고, 부실채권의 비중이 금융시장 전체 규모와 비교해 안정성을 저해할 정도로 크지 않았기 때문에 시장친화적인 부실 처리방식이 통용될 수 있었던 것으로 평가된다.

하지만 이는 공적자금 회수 과정에서 적극적인 구상권 행사와 부실관련자에 대한 철저한 문책권을 행사함으로써 공적자금 회수 기반을 확대하는 등 정부 주도 하에 일관성 있는 정책 집행이 성공적인 위기 극복의 요인인 것으로 볼 수 있다.

#### 4.2 미국 : TARP(Trouble Asset Relife Program)

미국에서는 2000년대 초반의 금리 환경에 따라 형성된 주택시장의 거품 문제가 서브프라임 모기지 부실로 말미암아 일시에 터지면서 이와 관련된 금융상품을 중심으로 신용경색 등의 문제가 금융시장 전반에 발생하게 되었다.

대규모의 모기지 관련 부실채권이 미국 금융시장에 급격히 유입되자 미국 정부와 금융당국은 부실채권 정리를 위한 TARP를 설립함으로써 부실채권 정리의 효율성을 극대화하는데 초점을 맞추었다.

TARP는 미국 정부가 서브프라임 모기지 관련 금융위기에 대응하기 위해 마련한 대표적인 공적지원 프로그램으로써 금융시장의 취약부문은 과감히 퇴출시켜 금융시장의 건전성을 회복하고, 경제 주체의 재기를 지원하여 정상적인 경제 활동을 할 수 있도록 돕는 것이 설립 목표였다.

TARP는 미국 정부와의 긴밀한 공조 하에 은행산업 자금을 지원하고 부실한 모기지담보증권(MBS)를 인수하여 금융시장의 유동성을 지원하고 금융회사 모기지 리

파이낸싱 활성화함으로써 주택금융 정책 지원 등을 수행하였다.

특히 국가의 재원으로 조성된 구제금융을 민간 분야에 투입하는 것에 대한 도덕적 해이 논란에도 불구하고 정부의 신속한 대응책으로 실직, 파산, 압류 등으로부터 고통받는 경제 주체를 보호했다는 관점에서는 큰 의미가 있다.

이는 미국 정부의 시의적절한 대응으로 위기 확산을 예방하고 대내외적인 불안 요인을 사전에 인지하고 대응함으로써 신속한 경제 회복의 기반을 조성한 것으로 평가된다.

TARP는 시장의 자율적인 경쟁을 중요시하는 미국 정부가 위기 발생 시 적극적인 정부 개입의 필요성을 피력한 것으로 우리나라의 금융위기 발생 시 위기 극복을 위한 방안을 제시하였다는 시사점을 제공한다고 보여진다[26].

#### 4.3 미국 : PPIP(Public Private Investment Program)

PPIP는 TARP의 핵심 프로그램으로서 금융위기의 주된 원인인 모기지와 관련한 부실채권을 미국 정부가 직접 매입하여 금융시장 안정성을 회복시키기 위한 목적으로 시행되었다. 즉, 공적자금 투입으로 민간 공동 부실채권 매입에 따른 리스크를 분산하여 궁극적으로는 금융시장의 정상화를 도모한다는 것이다.

미국 정부는 PPIP를 시행함으로써 금융위기에 따라 침체된 증권화 금융상품 시장의 활성화를 위해 민간 투자를 촉진제로 활용하였다. 특히 정부의 적극적인 지원에 따라 민간 영역의 참여가 원활히 이루어지면서 유동화 시장 정상화 및 금융위기 극복 등의 주된 역할을 수행하였다.

민간 부실채권시장이 일반적인 금융 환경에서 미국 정부의 신속한 개입으로 성과를 거둠에 따라 민간 부실채권시장이 형성된 여타 국가의 유사 위기 대응에 방향을 제시하였다.

그러나 민간투자자 유치를 위한 PPIP 자금 구성에 민간투자 규모와 비교하여 정부의 지원 비중이 높아 민간의 도덕적 해이에 따른 공적자금 손실이 발생할 가능성이 있다. 또한, 정부 보증으로 민간 투자액의 14배까지 부실채권을 매입하는데 지원하고 이익은 50%로 나누는데 반해, 손실이 발생할 경우에는 정부가 대부분의 손실을 부담하는 등의 한계를 가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정부의 엄격한 통제 감시가 따랐음에도 민간운영에 따른 리스크를 수반하고 공적자금의 회수를 극대화한다는

측면에서는 불안정성이 상존하고 있었다는 평가가 나온 바 있다.

#### 4.4 중국 : 4대 AMC

중국 정부는 1999년 부채의존 성장 및 국영기업들의 비효율적 운영으로 부실채권이 급증하자 국영은행 부실채권을 매입·정리하는 창청(농업은행), 화룽(공상은행), 동팡(중국은행), 신다(건설은행)의 4개 국영 자산관리회사 설립을 허가하였다.

4대 AMC는 매각, 자산유동화, 출자 전환, 합자회사 설립 등을 통해 부실채권을 정리하였다. '02년말 부실채권 규모는 2.3조 위안, 부실채권 비율은 23.6%이었으나, 정부의 적극적인 부실채권 정리로 '11.3분기 부실채권 규모는 0.4조 위안, 부실채권 비율은 0.9%로 최저 수준을 기록하였다.

그러나 '11년 이후 경제성장률 둔화에 따른 한계기업의 증가로 '20.3분기 부실채권의 규모는 2.84조 위안으로 또다시 '11.3분기 대비 약 7배 증가하였다. '20년말 기준 4대 AMC의 자산규모는 약 5조 위안으로 중국 부실채권시장의 90% 이상을 점유하였으며, 4대 AMC는 규모가 커지면서 은행의 부실을 인수·정리하는 설립목적과는 달리 은행으로부터 대규모 자금을 조달하여 사모주식, 정크본드 투자, 신탁 등으로 투자영역을 확장하였다.

이 과정에서 화룽자산관리공사는 '20년 실적보고서 제출 지연과 재무 건전성 악화로 인해 홍콩 증권시장에서 거래가 중지되는 등 디폴트에 노출되었다. 화룽자산관리공사가 해외에 발행한 회사채 가격의 급락에 따른 대규모 손절매도, 디폴트 우려 등이 야기한 혼란은 아시아 채권시장 전반으로 확산되었다.

이에 대해 중국 정부가 그간 국영기업에 대해 공적자금을 지원했던 것과는 달리 화룽자산관리공사에 대해서는 구조조정 전망이 나오면서 위기설이 본격화되었다. '21.4월 글로벌 신용평가기관 Moody's 와 Fitch는 화룽자산관리공사의 신용등급을 강등하면서 중국 경제의 뇌관으로 자리하게 되었다.

화룽자산관리공사의 부실사태는 천문학적 규모의 부정부패와 무분별한 채권발행 및 투자에 따른 부실화가 직접적 원인이나, 그간 중국 국영 자산관리회사들의 무분별한 사업영역 확장에 따른 부실 위험 누적도 원인으로 작용하였다. '16년말 화룽자산관리공사 본연의 업무와 관련된 '부실채권' 자산 보유 비율이 26%인 반면 '기타금융상품'은 40%까지 증가하였다.

화룽자산관리공사는 국영은행의 상시적인 위기에 대

비하기 위해 설립되었으나, 부실채권 정리 본연의 역할 이외에 무분별한 사업 확장으로 설립 취지가 크게 훼손되었다. 중국 금융시장이 점차 위기 상황으로 치닫고 있는 상황에서도 그 역할을 외면하였던 것이다.

화룽자산관리공사의 부실 사태는 부실채권 정리와 같은 공공성을 갖추어야 하는 분야를 민간에 전적으로 맡길 수 없는 이유를 보여주는 사례이기도 하다. 부실채권 정리를 주된 업으로 하는 기관은 공적 기능에 충실하되 지속가능성을 담보로 한 수익성 있는 사업을 추진할 필요가 있다. 동시에 정부 정책과제의 차질없는 이행으로 공공성 향상 노력을 병행할 필요가 있을 것이다.

#### 4.5 일본 : RCC(Resolution & Collection Co.)

80년대 중반 이후 버블 형성기에 일본기업들이 자산증식이나 이익창출수단의 하나로 확보했던 유가증권(주로 주식)과 토지가, 버블 붕괴로 90년대에는 오히려 자산가치를 연쇄적으로 하락시키는 요인으로 작용하였다. 특히 부동산 버블의 붕괴는 은행 대출채권의 급격한 부실화를 초래하였다. 부동산 버블이 붕괴되면서 은행이 대출 담보로 설정해 놓은 토지의 가격이 담보설정액 이하로 하락하였다. 자산 가격 하락에 동반한 디플레이션 불황으로 인해, 차입기업들이 원리금을 상환하지 못하게 되자 도산업체가 급속하게 증가하였다.

신용경색으로 인해 기업의 자금순환에 차질이 생기고, 경기침체로 수익성이 악화된 기업이 늘어나면서 은행의 대출채권은 급속하게 부실화되었다. 부실채권의 장기화는 한계 기업이 도태되지 않고 존속될 수 있는 환경을 조성, 산업구조조정을 지연시켜 산업성장을 저해하였다. 결국 일본 경제 전체의 성장성은 낮아지고, 자산가치의 하락 및 불황이 장기화되며, 동시에 새로운 부실채권이 생겨나는 악순환이 반복되었다.

1990년대 중반 이후 도산 은행들이 증가하게 되자, 일본 정부는 1998년 10월 금융기능재생법을 제정하여 금융회사 파산처리 원칙에 따라 공적자금을 투입함으로써 본격적으로 도산 은행들을 처리하였다.

금융기능재생법에 기초하여 1999년부터 예금보험기구에서는 부실금융회사로부터 부실채권을 인수하였다. 이를 실무적으로는 예금보험기구를 대신하여 RCC가 담당하였다. RCC는 1999년 4월 정리회수은행과 주택금융채권관리기구의 통합으로 예금보험기구가 전액 출자하여 설립된 주식회사다. RCC가 전담하여 회수하고 있는 부실채권에 대한 정리·회수는 비교적 원활하게 추진되었다.

그러나 부실채권 규모가 공적자금 투입 이후인 2002

년 3월까지도 지속적으로 증가하는 등 금융구조정의 효과가 쉽게 나타나지 않았다. 이에 따라 2002년 3월말 기준으로 대형은행 부실채권 잔액은 27조 엔, 그리고 은행권 전체(대형은행, 지방은행, 제2지방은행) 부실채권 규모는 52.4조 엔에 달하였다. 일본 정부는 금융회사의 부실 사태가 표면화되고 나서야 구제금융회사를 통해 영업을 인수한 데다, 공적자금 투입도 개별기관별로 결정하지 않고 은행권 전체를 대상으로 분산투입함에 따라 그 효과가 반감되었다.

일본의 부실금융회사 관련 처리가 초기에 지연되었던 것은 버블 붕괴 초기(1990~1992년경)에 정부뿐만 아니라 기업 및 금융회사들도 버블 붕괴에 따른 영향의 심각성을 과소 평가했던 데 기인한다. 당시 일본에는 자산가격의 하락으로 어느 정도 버블이 제거되면 일본경제의 성장세가 다시 이어질 것이란 인식이 팽배했다. 이에 따라 초기에는 금융회사들이, 자금난경영난에 봉착한 기업에 대해서도 자금회수 보다는 추가 용자하는 방안을 선택했다. 정부 정책 또한 공적자금의 투입 등을 통한 부실채권 처리나 근본적인 구조조정 대신, 내수 진작을 위한 재정확대나 저금리 정책 등에 치중되었다.

그러나 일본 정부가 2003년 들어 산업재생기구 설립, 독점금지법 개정 등을 통하여 금융회사 구조조정의 박차를 가한데다 지속적인 경제 회복세에 힘입어 2005년 3월 현재 부실채권 잔액은 2003년의 절반 정도로 축소되었다. 대형은행 부실채권 잔액이 2004년 3월말 기준으로 14조 엔으로 2년 전의 절반 수준으로 축소된 데다 은행권 전체의 부실채권 잔액도 2005년 3월말 기준으로 2002년의 절반 수준인 24.9조 엔으로 크게 축소되었다.

## 5. 공적 기구의 필요성과 정책 대안

### 5.1 해외 사례 시사점

미국 정부는 공적자금 유입을 통해 민간이 부실채권 투자에 참여하도록 함으로써 유동화 증권시장의 정상화 및 부실채권을 정리하는 역할을 수행하였다. 특히 부동산 담보 부실채권의 경우 시중 매각이 용이하여 공적 AMC를 통한 정리는 효율적인 수단으로 판단되었다. 이는 미국 서브프라임 모기지 부실 사태 당시 PPIP를 통한 모기지 부실채권 정리 사례로도 확인할 수 있다. 기업 관련 부실채권의 경우 구조조정 및 채무조정 등이, 무담보 부실채권은 시장을 통한 매각과 증권화 및 공적 AMC 설립이 효율적 정리기법으로 평가되었다.

반면, 중국은 정부 주도의 4대 AMC 설립을 통해 부실채권 문제를 해결하고자 하였으며, 설립 초기에는 큰 성과를 이루었다. 그러나 시간이 지날수록 부실채권 정리 본연의 역할 이외에 사모주식, 정크본드 투자, 신탁 등 수익성을 추구하기 위한 무분별한 사업 확장으로 본연의 설립 취지가 크게 훼손되면서, 결국 화물자산관리 공사의 부실사태에 이르게 되었다. 이는 부실채권 정리와 같은 공공성을 갖추어야 하는 분야를 민간에 전적으로 맡길 수 없는 이유를 여실히 보여주는 사례이기도 하다.

한편, 일본 정부도 자회사 형태의 배드뱅크를 설치·운영하였으나, 경기침체 이후 부실채권 정리에 미온적 입장을 취함으로써 일본 정부가 부실 금융회사의 조기 퇴출에 앞장섰다는 비판적 시각이 있다. 전반적인 일본 정부의 위기 대응은 부실채권의 과감한 정리보다는 자산가격 회복 지원 등 미봉책으로 일관함으로써 부실이 더욱 심화되는 결과를 초래하였고 이것이 결국 장기침체를 야기한 것으로 평가되고 있다. 부실채권 정리가 민간에 전적으로 맡겨질 경우, 경제 위기 시 미온적 입장을 취할 것은 자명한 사실일 것이다.

### 5.2 공적 부실채권정리기구의 필요성

외환위기 이전에는 부실채권 처리가 정책적으로 결정되어, 채권자와 채무자 또는 채권자 간에 직접 이루어짐에 따라 부실채권 거래시장이 공식화되지 못하였다. 또한 당시는 개발 경제시대로서 부실기업 정리는 정부의 경제정책에 따라 산업합리화 조치의 큰 틀에서 결정됐다. 이러한 산업합리화 방식의 기업구조조정은 일관성 있는 원칙의 부채 및 정책 투명성의 결여로 인해 많은 비판의 대상이 되었다[27].

부실채권의 신속한 정리를 위해서는 법적·제도적 뒷받침이 필수적이다. 법적 제약으로 채무조정, 구조조정 등에 필요한 시간과 비용이 장기화되거나 매각, 증권화 등이 제한될 경우, 효과적인 부실채권 정리가 불가능하므로 공적 AMC 설립 시에도 특별법 제정 등 적극적인 법적 지원이 필수 전제 조건이었다.

부실채권 정리는 개별 은행뿐만 아니라 금융·경제 전반에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정책 차원의 종합적 해결책 마련이 중요하다. 정책당국은 과거 금융위기와 각국의 부실채권 정리 사례를 분석하고 유형화하여 적절한 부실채권 정리 방법을 적용할 필요가 있다.

전 세계적으로 저성장세가 이어지고 있는 가운데 우리나라 역시 현재 경기가 하강 국면이거나 경기 저점을 지나고 있는 것으로 평가된다. 이러한 저성장 시기일수록

한계 기업에 대한 구조조정이 신속히 이루어져야 하며, 이런 관점에서 부실채권처리기관의 역할이 중요해질 수 밖에 없다.

금융위기 상황에 직면했을 때 부실처리기관의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는 민간 AMC들이 제 역할을 하지 못한다면 금융시장의 안정성을 확보하기 어렵다. 따라서 금융위기 발생 시를 대비하고 효율적인 부실채권시장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공적 AMC의 역할 제고 방안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

### 5.3 정책 대안

코로나19에 따른 영업활동 제한, 사회적 거리두기 장기화 등으로 가계 및 소상공인의 신용지표가 현저하게 악화되고 있다. 이를 지원하기 위해 정부는 만기 연장, 상환 유예 등 금융지원 조치를 시행하고 있지만 이마저도 2022년 1분기에 종료 예정이다.

대부분이 용자 형태 및 상환 유예조치로 이루어져 있기 때문에 지원 대상자들의 부채 상환부담은 여전히 남아 있으며, 정책 종료 후 누적된 부실이 취약 가계 및 소상공인 대출로부터 폭증할 가능성이 높아짐에 따라 선제적인 금융안전망의 구축이 절실하다.

이에 따라 채무조정제도를 개선하여 신용회복을 적극 지원하며, 소상공인 관련 특화된 프로그램을 신설하여 경제 활동 복귀를 지원하는 일 또한 시급한 문제다.

이를 통해 취약 가계 및 소상공인으로부터 부실 확산 가능성을 선제적으로 차단하고 코로나19 피해에 대해 적극적인 지원 체계를 구축할 필요가 있을 것이며, 민간 부문에서는 기대하기 어려운 채권 결집 및 일괄 채무조정을 위하여 정부 차원에서의 금융회사 참여 독려가 필요할 것이다.

공적 AMC는 민간 AMC의 난립을 막고 건전한 투자 문화를 선도하는 역할을 수행할 수 있다.

최근 부실채권에 투자하는 금융회사들이 증가하면서 부실채권 투자의 수익성이 하락하고 있다. 부실채권시장의 진입 장벽이 높지 않음에 따라 시장에 참여하는 금융회사가 증가했기 때문이다. 이에 따라 연 10%대를 유지하던 부실채권 투자수익률은 2014년 상반기에 5%대로 하락하였다.

2014년 상반기에 매각된 주요 은행의 부실채권 낙찰가 비율이 대부분 90%를 상회하면서 낙찰 경쟁 역시 심화되고 있다. 이러한 경쟁 심화는 채무자에 대한 과도한 상환압박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공적 AMC의 역할이 더욱 중요한 상황이다.

부실채권 투자는 워크아웃을 통해 개인 및 기업 부실 채무자의 정상화를 돕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그러나 최근의 부실채권시장에서는 유동성 부족으로 어려움을 겪는 기업들을 낮은 가격에 인수한 후 되팔아 매각 차익을 얻으려는 투기적 성향이 나타나고 있다. 부실채권시장에서는 단순한 매매 거래보다 사업구조개선을 통한 기업 가치 정상화를 지향하는 분위기가 조성되어야 한다.

이를 위해서는 부실기업들을 위한 실질적이고 체계적인 구조조정을 할 수 있는 시장조성자가 필요하다. 단기적 수익을 증시하고 채무자로부터 대위변제를 통해 대출 회수에 중점을 두는 민간금융회사나 민간 AMC에게 시장조성자로서의 역할을 기대하기는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이런 관점에서 공적 AMC가 증장기적으로 회생 가능한 채권을 매입하고 사업구조개선을 통해 부실기업들의 경쟁력을 높일 수 있는 시장조성자로서의 역할을 수행할 수 있도록 조치할 필요가 있다.

## 6. 결론

1997년 초 H그룹에서 시작된 연이은 대기업 도산과 금융회사 부실의 급증, 대외 신인도 하락으로 인해 우리나라는 IMF 경제위기라는 미증유의 상황을 경험하였다. 기업부도 확산에 따라 금융회사의 부실채권 규모도 크게 확대되는 등 금융회사의 건전성도 악화되었다.

이에 정부는 공공기관인 한국자산관리공사에 부실채권정리기금을 설치하여 금융회사 부실채권을 조기에 매각하도록 하였다. 이 과정에서 우리나라에도 부실채권이 공식적으로 거래되는 부실채권시장이 형성되었으며, 이후 유암코, 대신F&I 등 민간 부실채권정리회사가 참여하면서 현 시점에서는 부실채권시장이 성숙단계에 들어섰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그러나 민간 부실채권정리회사 주도로 진행되고 있는 우리나라의 부실채권 정리는 주로 채권자인 금융회사 위주로 이루어지는 문제점이 있다. 부실채권이 경제 내에서 완전히 정리되기 위해서는 금융회사로부터 부실채권을 분리시켜 금융시장을 안정시키는 것 외에, 채무자로부터도 부실채권을 분리시켜 부실채권을 야기한 채무자의 재기를 유도할 필요가 있다. 이러한 보다 넓은 의미의 부실채권 정리를 위해서는 민간의 부실채권시장을 지원하고 보완하는 견제자로서의 역할을 담당하는 공적기구가 필요하다.

해외의 공적 부실채권 정리 사례에서 살펴 보았듯이,



미국 정부는 공적자금 유입을 통해 민간이 부실채권 투자에 참여하도록 함으로써 유동화 증권시장의 정상화 및 부실채권을 정리하는 역할을 수행하였다. 특히 부동산 담보 부실채권의 경우 시중 매각이 용이하기 때문에 공적 AMC를 통한 정리가 효율적인 수단으로 판단되었다.

반면, 중국은 정부 주도의 4대 AMC를 설립하였으나, 부실채권 정리 본연의 역할 이외에 사모주식, 정크본드 투자, 신탁 등 수익성을 추구하기 위한 무분별한 사업 확장으로 본연의 설립 취지가 크게 훼손되었다. 그 결과 화물자산관리공사의 부실사태에 이르게 되었다.

한편, 일본 정부도 자회사 형태의 배드뱅크를 설치·운영하였으나, 전반적인 일본 정부의 위기 대응에 대해서는 부실채권의 과감한 정리보다는 자산 가격 회복 지원 등 미봉책으로 일관함으로써 부실이 더욱 심화되는 결과를 초래하였고 이것이 결국 장기침체를 야기한 것으로 평가되고 있다.

금융위기 상황에 직면했을 때 부실처리기관의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는 민간 AMC들이 제 역할을 하지 못한다면 금융시장의 안정성을 확보하기 어렵다. 따라서 금융위기 발생 시를 대비하고 효율적인 부실채권시장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공적 AMC의 역할을 제고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

정부는 부실채권시장에서 민간부문의 한계를 보완하고 공정한 경쟁을 할 수 있도록 공적기구와 전문성을 갖춘 민간 부문을 합친 혼합형 부실채권 정리 시스템을 고려해 볼 필요가 있다. 민간부문의 취약점을 보완하고 공적기관의 노하우를 공유함으로써 부실채권시장에서 시장 조성자로서의 역할을 수행할 수 있도록 조치할 필요가 있다.

한편, 금융위기 시 부실채권정리기구에 투입되는 기금은 공적자금인 만큼 회수 극대화에 치우쳐 부실기업 매각 속도가 지지부진할 수 있다는 비판에 직면한 바 있다. 외환위기 당시 공적자금이 투입된 S사와 D사는 오랜 기간 매각이 지연되면서 이들 기업의 경쟁력과 수익성이 악화되고 있다는 우려의 목소리가 있었다.

특히, D사의 매각이 10년 이상 장기화되었지만, 공공기관의 경영정상화 의지를 통해 성공적인 매각을 이루었다는 점에서 기업의 경쟁력과 수익성이 악화되고 있다는 우려의 목소리를 불식시킬 수 있었다.

부실채권정리기구에 투입한 공적자금은 2008년 7월 전액 상환되었다. 공적자금을 운용했던 스웨덴(86.0%), 미국(65.7%), 일본(17.0%) 등과 비교해 한국자산관리공사가 운영한 부실채권정리기금의 회수율은 무려 120%

를 초과하는 등 세계적으로 유례를 찾아보기 어려운 성과를 남겼다.

## References

- [1] G. H. Jeong, Y. W. Seo, "A Study on the Impacts of SMEs' Environmental Sustainability and Innovation Orientation on Sustainability Performance through Social Integration and Technological Integration", *Journal of Digital Convergence*, Vol. 20. No. 1, pp. 165-178, 2022  
DOI: <https://doi.org/10.14400/JDC.2022.20.1.165>
- [2] H. G. Jeong, C. L. Qing, "The Effect of Government Star-up Support Project on Business Performance: Focused on the Mediating Effects Start-up Satisfaction", *Journal of Digital Convergence*, Vol. 19. No. 6, pp. 85-90, 2021  
DOI: <https://doi.org/10.14400/JDC.2021.19.6.085>
- [3] K. S. Lee, K. J. Choi, D. M. Cho, "A study on the analysis of the offshoring(overseas expansion) of foreign companies and the reshoring(return to home country) of domestic companies in the US market", *Journal of Digital Convergence*, Vol. 18. No. 12, pp. 183-193, 2020  
DOI: <https://doi.org/10.14400/JDC.2020.18.12.183>
- [4] D. S. Jung, "An Empirical Study on the Marketing Strategy for the Activation of management of the start-up Small Business", *Journal of Digital Convergence*, Vol. 17. No. 11, pp. 105-115, 2019  
DOI: <https://doi.org/10.14400/JDC.2019.17.11.105>
- [5] S. W. Lee, H. S. Lee, "A Study on the Operation and Plan for Revitalizing Start-up Performance of Micro-enterprise", *Journal of Digital Convergence*, Vol. 16. No. 12, pp. 11-20, 2018  
DOI: <https://doi.org/10.14400/JDC.2018.16.12.011>
- [6] G. M. Lee, S. B. Kim, "Technology Financing for Export-Import based Small and Medium Sized Enterprises: Focused on Supported Enterprises by the Export-Import Bank of Korea", *Journal of Digital Convergence*, Vol. 14. No. 7, pp. 11-20, 2016  
DOI: <http://doi.org/10.14400/JDC.2016.14.7.11>
- [7] S. H. Jeong, Y. H. Lee, "Information Efficiency of Financial Statement on the Firm Value", *Journal of Digital Convergence*, Vol. 14. No. 10, pp. 107-117, 2016  
DOI: <http://doi.org/10.14400/JDC.2016.14.10.107>
- [8] Korea Asset Management Corporation, White Paper on Non-Performing Loans Resolution Fund, pp.40-52, KAMCO, 2013
- [9] W. J. Kim, "Measures to engage public AMC's in resolving a Financial crisis," KAMCO Review No. 9, pp.2-29, 2016
- [10] T. H. Ahn, B. G. Park, "The Effects of Corporate

- Social Responsibility on Customer Satisfaction and Customer Citizenship Behavior: Mediating Effects of Company Image and CSV”, *Journal of Digital Convergence*, Vol. 15. No. 4, pp. 223-231, 2017  
DOI: <https://doi.org/10.14400/JDC.2017.15.4.223>
- [11] A. R. Choi, J. H. Koo, “A Study on Factors Affecting Foreign direct Investment in Korea”, *Journal of Digital Convergence*, Vol. 15. No. 6, pp. 1-8, 2017  
DOI: <https://doi.org/10.14400/JDC.2017.15.6.1>
- [12] H. S. Lee, S. H. Lee, “Study on the Environment of Collaboration on Private Enterprises: Focusing on the Implications for Public Organization”, *Journal of Digital Convergence*, Vol. 14. No. 9, pp. 1-7, 2016  
DOI: <http://doi.org/10.14400/JDC.2016.14.9.1>
- [13] S. H. Choi, J. I. Choi, “Analysis of Volatility and Directionality of Korean Imports and Exports : Focused on USA, Japan, China, UK”, *Journal of Digital Convergence*, Vol. 15. No. 10, pp. 113-121, 2017  
DOI: <https://doi.org/10.14400/JDC.2017.15.10.113>
- [14] S. G. Park, “Business performance and earnings quality in the information and communication industry before and after the COVID-19 pandemic”, *Journal of Digital Convergence*, Vol. 19. No. 11, pp. 113-119, 2021  
DOI: <https://doi.org/10.14400/JDC.2021.19.11.113>
- [15] C. H. Lee, “A Study on Relations of Macroeconomic Events and Investment Real Estate Holdings of Corporate”, *Journal of Digital Convergence*, Vol. 15. No. 11, pp. 113-120, 2017  
DOI: <https://doi.org/10.14400/JDC.2017.15.11.113>
- [16] S. H. Ji, Y. M. Kwak, “K-IFRS Reconciliations and Predicting Future Earnings”, *Journal of Digital Convergence*, Vol. 15. No. 12, pp. 283-291, 2017  
DOI: <https://doi.org/10.14400/JDC.2017.15.12.283>
- [17] J. Y. Lee, “The Current Situation of NPL market and the role of the Public Institution in Korea”, *KAMCO Review* No. 4, pp.32-69, 2014
- [18] I. H. Lee, SIRFE Occupational Paper 09-P02, Seoul National University Institute of Finance and Economy, Republic of Korea, pp.18
- [19] H. M. Kim, “Factors Influencing Social and Economic Performance of Social Enterprises”, *Journal of Digital Convergence*, Vol. 19. No. 12, pp. 1-9, 2021  
DOI: <https://doi.org/10.14400/JDC.2021.19.12.001>
- [20] Y. W. Ko, “The Changing Financial Properties of KSE Listed Companies”, *Journal of Digital Convergence*, Vol. 19. No. 5, pp. 241-247, 2021  
DOI: <https://doi.org/10.14400/JDC.2021.19.5.241>
- [21] D. I. Kim, “Analysis of the Relationship between the Initial Public Offering Process and Earnings Management”, *Journal of Digital Convergence*, Vol. 18. No. 12, pp. 243-249, 2020  
DOI: <https://doi.org/10.14400/JDC.2020.18.12.243>
- [22] Y. B. Cho, “A Study on Social Finance Market in Korea : Focused on Social Impact Bond”, *Journal of Digital Convergence*, Vol. 16. No. 4, pp. 11-22, 2018  
DOI: <https://doi.org/10.14400/JDC.2018.16.4.011>
- [23] H. S. Lee, S. H. Lee, “Study on Organizational Performance: Focused on Public Institutions”, *Journal of Digital Convergence*, Vol. 15. No. 3, pp. 47-54, 2017  
DOI: <https://doi.org/10.14400/JDC.2017.15.3.47>
- [24] S. W. Kim, “A Conceptual Framework for the Personalization of Public Administration Services”, *Journal of Digital Convergence*, Vol. 14. No. 8, pp. 57-67, 2016  
DOI: <http://doi.org/10.14400/JDC.2016.14.8.57>
- [25] I. M. Park, NPL Investment: Higher interest, changing industry landscape, Special Report, Korea Investors Service, Republic of Korea, pp.9-12
- [26] J. Kim, “The need for resolution of non-performing loans of public organizations and roles”, *KAMCO Review* No. 7, pp.2-39, 2015
- [27] D. S. Kang, The Current Status of The Domestic and Foreign Non-Performing Loans markets, research data 2002-01, KDI, Republic of Korea, pp.29-30

윤 한 국(Han-Kuk Yun)

[정회원]



- 2020년 2월 : 부산대학교 경영학과 (경영학석사)
- 2020년 3월 ~ 현재 : 부산대학교 경영학과(박사과정)

<관심분야>

재무회계, 세무회계

김 진 섭(Jin-Seop Kim)

[정회원]



- 1991년 2월 : 한남대학교 회계학과 (경영학석사)
- 1997년 2월 : 한남대학교 회계학과 (경영학박사)
- 1998년 3월 ~ 2006년 2월 : 밀양대학교 회계정보학과 교수
- 2006년 3월 ~ 현재 : 부산대학교 경영학부 교수

<관심분야>

재무회계, 세무회계